

2014년도  
주요업무현황

2014. 2월



# 목 차

I. 일반현황 .....	1
II. '14년 정책여건 및 비전 .....	3
III. '14년도 주요업무계획 .....	5
1.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.....	5
2.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.....	11
3.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.....	17

# I 일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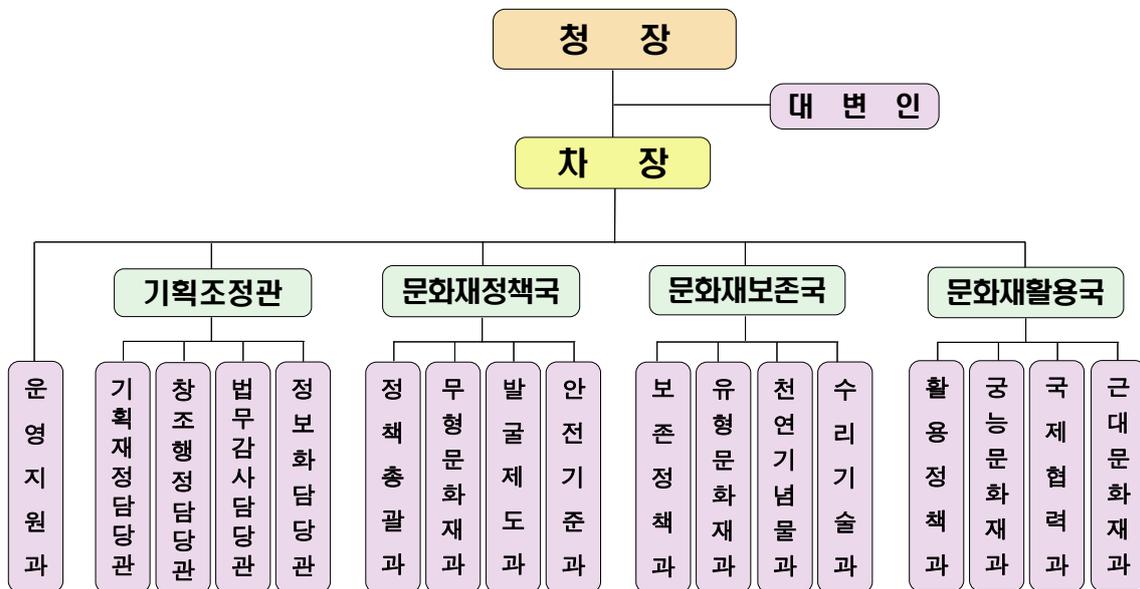
1. 임 무 :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

## 2. 연 혁

- 1945.11월 구황실 사무청 발족 (미군정 관할)
- 1961.10월 문화재관리국 설치
- 1999. 5월 (1급기관)문화재청 ('04.3월 차관청)

3. 기 구 : 1관 3국 18과 14소속기관, 정원 886명

《 본 청 》 269명



《 소속기관 》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국립문화재연구소, 국립고궁박물관,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, 4대궁종묘, 국립무형유산원 등 14개 기관, 617명

## 4. 예산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11년 예산	'12년 예산	'13년 예산	'14년 예산	비고
계	5,228	5,577	6,148	6,199	
일반회계	4,088	4,329	4,921	5,072	
광특회계	210	148	162	98	
문화재보호기금	930	1,100	1,065	1,029	'09년 도입

## 5. 문화재현황 : 총 11,962건('13.12.31일 기준)

-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: 4,107건
  - 국보 315건, 보물 1,774건, 사적 485건, 명승 106건, 천연기념물 434건, 중요무형문화재 119종목, 중요민속문화재 280건, 등록문화재 594건
- 시·도지정문화재 5,388건, 문화재자료 2,467건
- ♣ 유네스코 등재 유산 37건 : 세계(문화·자연)유산 10건, 세계기록유산 11건, 인류무형유산 16건

## 6. 소관법령 및 위원회

### 【소관법령】

- 「문화재보호법」 ('62제정),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('04제정), 「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 ('06제정), 「문화재보호기금법」 ('09제정)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('10제정)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('10제정),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」 ('11제정)
-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('62제정)

### 【문화재위원회】

- 9개 분과 79명(겸직 포함 105명/ 전문위원 189명) / 임기 2년('13.5.1~'15.4.30)

## II '14년 정책여건 및 비전

### 1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

<p>문화재 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문화재 지정 건수 증가 (’08년) 10,375건 → (’13년) 11,962건</li> <li>◆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건수 증가 (’09년) 1,094건 → (’13년) 1,704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형별 관리체계 특성화</li> <li>• 합리적 규제·보상 체계 강화</li> </ul>
<p>문화재 현장 여건 악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수리현장 감시체계 미흡</li> <li>◆ 성능부족 재료, 기술력 부족으로 문화재 수리공사 한계점 봉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</li> <li>• 수리기술 품질 개선</li> </ul>
<p>문화유산 관심 증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문화유산 방문객 증가 (’09년) 1,014만명 → (’13년) 1,093만명</li> <li>◆ 문화유산 관심수준 증가 (’10년) 31.1% → (’12년) 33.5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</li> <li>• 콘텐츠 확충 및 정보 공개 확대</li> </ul>
<p>문화유산에 대한 요구 다양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규제 위주 문화재 보존정책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요구 증대</li> <li>◆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주변 국간 경쟁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합리적 규제·보상 체계 강화</li> <li>• 매력적 문화유산 공간 조성</li> <li>• 세계유산 등재 확대</li> <li>• 무형유산법 제정</li> </ul>



**중점과제 1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****◆ (현 황) 송례문 단청 박락, 팔만대장경판 일부 훼손 등 국가대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관리 문제 대두****● 문화재의 이상징후 발생 등 상태 예측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미흡**

\* 경미한 수준의 일상점검 및 변화를 예측하기에 긴 점검간격(5년 단위)

**● 문화재 현장의 과거 답습적 관성으로 인해 창의적 문화재 수리 시스템 미비**

\* 전통재료 수급 및 시공기법에 대한 심층연구 부족

\* 수리업자의 수리품질 만족도 : 70.2% ('12년, 한국건축역사학회)

**● 경쟁력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 증대**

\* 수리기술자 시험의 전문성 공감 : 34.9% ('12년, 한국건축역사학회)

\* 지자체 공무원의 문화재 관리업무 기피 이유 : 전문성 부족(41.2%)

**◆ (추진방향) 안전한 문화유산, 수리품질 획기적 개선****● (상시점검 관리체계) 상시 모니터링, 문화재 현장의 대응 능력 배양 등을 통해 안전한 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****● (수리품질 획기적 개선) 수리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인한 수리공사의 '부실요인 발본색원을 추진하는 원년의 해'로 조성****● (인력양성 및 지자체 역량 강화)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자체-민간의 문화재관리 역량 강화체계 구축**

# 1 문화재 상시점검 관리체계 강화

## □ 부실관리 논란 등에 따른 문화재 특별점검

- 지정문화재 중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 문화재 전면점검(국가지정문화재 1,447건, 시□도지정문화재 5,305건/ ~'14.4월, 8억 원)
  - 구조적 안정성□노후도□생물피해, 방재설비, 관리실태 등 종합조사 실시
  - 이상 징후 발생 시, 전문점검단을 구성하여 즉시 정밀진단 실시

< 대한성공회 강학성당 점검 >



- 훼손도□위험도 등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관리 촉진
  -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,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('14.4월~)

## □ 사전 예방적 문화재 점검기반 구축

-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'문화재 돌봄사업' 지원 확대 ('13년 2,200여개소 460명 74.3억원 → '14년 5,500여개소 589명, 100억원)
-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(5년→3년)
  - 중요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상시점검 결과, 인터넷□모바일 공개
- 문화재 상시관리 제도적 지원 체계 강화
  - 직□간접적 위험요소 일상관리, 위해요인 제거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
    - \* 「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('14년)
  - 문화재현장 안전□경상관리 등 전문화를 위한 「문화재 관리사」 자격제 도입 추진

## □ 문화재안전정보 통합센터 운영 및 방재설비 품질 강화

- 분산된 문화재 방재정보를 '하나의 시스템'으로 조기 통합구축
  - 전국 문화재별 감시영상(CCTV)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통합
    - \* 시범구축(문화재청 ↔ 강원도, '14년 상반기/ 6억원), 전국망 확대('16년)
  - 산림청(지형, 산불정보), 기상청(기상, 재해) 정보를 '문화재 재난□안전 관리 통합시스템' 과 연계('14~'15년)
- 방재설비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 합동점검으로 품질관리 강화
  - 소방방재청, 전기안전공사, 가스공사, 소방협회, 지자체 등 참여

## □ 맞춤형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현장 방재역량 제고

- 문화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'안전상황실' 운영
  - 목조문화재 현장별 화재대응 매뉴얼 정비(544건)
  -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적□물적자원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지휘체계 일원화
- 문화재 화재예방 및 신속 초동대응체계 구축
  - 소유자□관리자□안전경비원 등 교육□훈련으로 상황대응력 강화
    - \* 소방안전협회 위탁교육(1회), 지자체별 자체교육(1회), 안전관리 교재·수첩 등 개발
  - 안전경비인력, 삽살개 배치로 화재예방 등 초동대응 체계 확립
  - 소방□산림□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「문화재 재난대응 정책협의회」 운영
- 문화재 유형□지역별 맞춤형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문화재 안전 관리 지도 단계적 개발('13~'15년/ 5.5억원 중 '14년 1.5억원)
  - 중요 목조문화재(333건) 안전관리 예측모델 개발
- 기후변화□생물피해 등으로부터 문화재 피해 최소화
  - 목조문화재 방충('14년 48건)□방염('14년 31동) 지속 실시
  -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전수조사 및 R&D연구 지속 추진

## 2 수리기술 품질 획기적 개선

### □ 자격증 불법대여 재발방지 및 자격제도 개편

- 자격 불법대여 일제 현장조사(매년)
  - 수리업체와 수리기술자 대상, 문화재청-지자체 합동점검(11~12월)
  - 자격증 불법대여자 행정처분기준 강화(자격취소 : 3차 적발 → 2차 적발)
-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격증 획득시스템으로 개편
  - 자격시험의 이론중심 검증에서 현장 실무능력 검증으로 보완 (심층면접제도 도입)
  - 경력공무원 대상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 폐지
    - \* 「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14년)

### □ 고착화된 장애요인 근본적 개선을 위한 법적 여건 정비

- 「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14년)
  - 중요문화재의 수리 공공성 강화 및 전통재료 관련 업체 인증제 도입
    - \* 전통부재보관센터 기능 활용('12년~'16년, 총사업비 290억원)
  - 전통기술□재료에 대한 국가 전략적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
- 기술인력 능력에 따라 수리참여를 결정하는 '경력관리제' 도입 추진
  - \* 경력별 참여 인력 차등(예 : 경력 15년이상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/ 경력 7년 이상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등)
- 수리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문화재수리공사 감리 대상 확대
  - \* 당해문화재 수리 : 5억원 이상 → 1억원 이상 / 문화재 주변 정비 : 7억원 이상 → 3억원 이상
- 문화재수리업무 직무능력표준(NCS) 개발 (산업인력공단 협의, 3월)
  - 업무매뉴얼, 교육기준, 시험기준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

## □ 수리업체·발주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
- 부실시공□감리 업체 및 기술인력 행정처분 기준 대폭 강화
  - 퇴출기준 : (업체) 삼진아웃 / (개인) 자격정지 1개월~6개월 → 3개월~1년
  - \* 「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14년)
- 저가 부실 하도급 차단을 위하여 '불법하도급 이면계약' 제도권 계약으로 전환 추진(공정위 협의, 3월)
  - 「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적용 대상에 문화재수리 포함

## □ 문화재수리 입찰방식 개선으로 시공품질 향상 (기재부, 안행부 등 협의)

-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□품질 등을 평가하는 입□낙찰제도 도입 연구(0.5억원)
  - \* 예) 문화재수리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 마련 등
- 업체 수리능력 평가, 중요 문화재수리공사 입찰 제한제도 도입 협의(2월)
  - \* 예) 국보 건축물 해체보수는 최고등급 업체만 입찰에 참여 등

## □ 수리현장 공개 및 수리실명제 도입 등 외부감시 강화

- 주요공정, 참여기술자, 감독□감리 이력카드 등 공개로 투명성□책임성 개선
  - 수리현장 정보 공개를 통해 부실 은폐 예방
  - 주요공정별 '공개의 날' 운영(7월)으로 부실가능요인 원천 제거
  - \* 재료 원산지, 이력카드 등을 수리현장 및 인터넷 등에 동시 공개
- 문화재수리 설계의 책임성 강화(3월)
  - 고층설계, 설계변경, 준공설계 전과정 설계자 참여 의무화

## □ 문화재 수리예산 지원방식 전면개편 협의

- 문화재 수리예산 계속비 편성 추진(예산 단년도주의 예외 적용)
- 위험중요문화재 수리예산 직권편성(보조율 70% → 100%) 법적근거 마련
- 시□도 문화재 수리 강화를 위해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추진
  - \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 추진('14년, 기재부 협의)

### 3 연구·개발 및 지자체 역량 강화

#### □ 문화유산 조사연구 경쟁력 강화

-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존□복원 기초기술 연구개발 강화
  - 복원재료□기술, 문화재 손상 예측□저감 방안 연구 등(43억원, 24개 과제)
- 부실논란 문화재의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
  - 송례문 안전점검 및 구조성능 조사, 석굴암 정밀구조안전진단, 팔만대장경 손상유형별 과학적 원인분석 등(14억원)
-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추진을 통한 연구품질 향상
  - 천연기념물(축양동물) 보존방안 연구(국립축산과학원), 한□일 고대 왕경유적 발굴현장 조사 등(28억원, 6건)
- 민간잠수인력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추진 등 책임성 강화

#### □ 경쟁력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

- 학부□대학원의 특성화 전략 강화
  - (대학원) 연구개발을 통한 대학원생의 글로벌 역량 제고 지원
  - (학 부) 현장과 실습을 강화한 실무융합형 특성화 교육
-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실기분야 교원(전임□비전임) 채용 확대
  - 실기중심의 문화재 보수 복원 교육과정 강화
- 문화재 보수 전문인력 교육 강화(전통문화교육원, 민간단체 협업)

#### □ 지자체 및 민·관 협력체계 강화

- 문화재현장의 효율적 정책전달체계 강화(1.5억원)
  - 문화재정책포럼(지자체공무원) 및 주민대상 정책홍보 등 공감 사업 운용
- 지자체 문화재 관리역량 향상 기반 마련
  - 공무원 직무교육(5월, 9월/ 각40명), 연수프로그램 개발 추진(3월, 0.7억원)
- 민간단체간 문화재보호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적 성과 창출 지원

## 중점과제 2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

### ◆ (현 황) 지속적 문화유산 보존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으나,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갈등이 상존하고 문화재 특성별 관리체계 개선 필요

#### ● 현상유지적 규제로 인해 국민불편 지속

- \* 문화재 규제개선 만족도 : 63.8%(13.12월, 현대리서치연구소)
- \* '12년 규제 만족도 평가결과 : 미흡

#### ● 문화재 특성별 종합 보존관리 체계 미흡

- \* 문화재별 1,834개 지침 운영, 종합적 판단기준 미비

#### ● 전통생활관습, 전통지식 및 미래 문화재 자원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

- \* 생활환경의 변화, 급속한 도시화□산업화로 인해 문화재 자원 단절 위기
- \* 문화재 보존관리 영역 확대에 대한 국가간(중국, 일본) 경쟁 심화

### ◆ (추진방향) 현상유지 중심의 문화재 보존방식 패러다임 전환 및 유형별 항구적 문화재 보존 체계 강화

#### ● (합리적 규제□보상) 고질적 국민불편 해소를 다양한 시책도입으로 자발적 □ 능동적 문화재 규제 준수 유도

#### ● (유형별 보존관리 체계화) 부분과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분야별 세부보존원칙 구체화

#### ● (보호□전승제도 선진화)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, 예비 문화재 제도 도입 등 잠재적 문화재 자원 보호 체계 구축

## 4 합리적 규제·보상 체계 강화

### □ 문화재 주변지역의 보존 규제 합리화

-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구체화하여 허가 투명성 제고
  - 건축물 높이 이외에 건물외관, 색채, 디자인 등 추가
  - 문화재별 상이한 구역별 행위제한 내용 표준화('14~'15년, 5억원)
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정성 재검토 제도 신설(5년 단위) 추진
  - 개발계획 등 사회적□경제적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
- 현상변경 허가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  - 허가조건 이행점검 결과, 착수□완료신고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

### □ 규제위주에서 진흥·장려행정으로 문화재보존 기본 틀 전환

-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내 지역의 역사문화경관 조성 유도
  - 허용기준을 준수하고, 문화재와 조화로운 건축행위 시, 건축비 지원 등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
    - \*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기본계획 마련('14~'15년)
  - 역사문화환경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(건물외관, 도로, 각종시설물 등) 및 주요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 시범사업 실시(7억원)
- 규제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보상(조세감면, 주민지원) 지원근거 마련
  - 규제지역 범위 내 주민대상, 생활편익□복리증진□경관개선 사업 등 지원(개발제한구역, 상수원보호구역, 공원구역 등 18개 규제는 주민지원 기 시행)
    - \* 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 추진 협의('14년)

## □ 매장문화재 조사 공공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

### ● 소규모 지표발굴조사 비용 국가부담 확대

- 민간부문 발주 30만㎡ 미만 지표조사 비용 국비 전액지원(연간 500여건 31억원)
- 농가 축사 등 소규모 건축물 발굴 지원 확대('13년 65억원 → '14년 105억원)
  - \* 신청대비 지원율을 현재 71%에서 100%로 확대

### ● '건축 인허가 민원'과 '지표조사 국비지원' 연계, **One-Stop** 서비스 도입

-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(2단계→1단계)로 국민편의 제고
  - \* '14년 시스템 설계구축, '15년 시스템 개통

## □ 발굴 보존유적의 관리체계 개선으로 고질적 민원 유발요인 제거

### ● 보존유적의 재평가 및 해제 등 선별적 관리로 국민불편 해소

- 지표발굴조사 후,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보존유적은 문화재 지정
  - \* 보존유적 재평가(~'15년) → 단계적 문화재 지정('14년~) → 유적매입 및 관리단체 지정('15년~)

### ●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존유적 토지이용규제 체계 도입

- 토지이용규제 확인 시발점인 토지이용계획원에 보존유적 포함
  - \*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개정 추진(국토부 협의)

### ● 미술품 설치 등 법정 의무의 보존유적 대체 근거 마련 추진

- 미술품 설치 또는 보존유적 보호 선택
  - \* 「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」 개정 추진(문체부 협의)
- 보존유적 면적을 '공개공지(公開空地)'로 인정
  - \* 「건축법시행령」 개정 추진(국토부 협의)

### □ 문화재 보존원칙 제도적 기반 구축

- 문화재 지정□보존□활용 전 영역에 대한 종합규범 체계 도입
  - 분야별 '법령-행정규칙-업무편람-해설서' 등 세부기준 고도화(~16년, 3.8억원)
  - 지자체공무원, 문화재소유자, 수리□발굴업체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개발계획 수립단계 부터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여건 조성
  - 현상변경 허가절차 개선 등 관계법령 정비, 현상변경처리지침 마련

### □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엄격한 제도 운영

-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지원을 통한 전통공예품 판로확대 지원
- 공명정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불공정 시비 차단
  - 지정심사 시,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 등 지정의 투명성□공정성 강화
  - 실기전문가 지정조사 공동 참여를 통해 지정조사의 전문성 강화
- 전승활동 평가결과에 따른 전승활동비 차등 지원(28.8억원)
- 개방형 충원을 통한 무형문화재 경쟁력 확보(2월, 훈령개정)
  - 일반전승자의 제도권 진입 개방 및 종목별 인간문화재 다수지정
- 기량 및 전승활동 점검결과와 사후조치(무형문화재 해제, 고발 등) 연계강화

### □ 동산문화재 보호·관리 체계화

- 동산문화재 소장자의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지원
  - 다량소장처 유물전시관 건립(월정사 등 3건, 23.4억), 훈증 소득 지원 (법주사 유물전시관 등 15개소, 1.5억) 등 동산문화재 훼손 방지
  - 소장자 보존관리 교육으로 문화재안전관리 기본역량 증대
- 기록유산 DB 통합구축□공개로 대국민 접근성 강화(10억원)
  - 규장각, 장서각 소장 전적류 100만여점
- 원본의 항구적 보존을 위한 조선왕조의궤 영인본 제작(10책, 2억원)

## □ 자연문화재 보호·관리 체계 강화

- 자연유산 지정 다양화 및 확대(7억원)
  - 비지정 동굴 일제조사, 명승 자원발굴, 사찰림 기초 자원조사 등
- 천연기념물 동 식물 유전자원 확보 협력(국립산림과학원, 국립축산과학원 등)
  - 노거수□희귀식물 후계목 육성 및 유전자은행 구축 확대
- 자연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
  - 천연기념물□명승 탐방로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
  - 구포동 대리 당산제 등 민속행사 발굴□재현(1.4억원)

## □ 중요민속문화재 보존·관리 체계 강화

- 거주자의 생활편의 제고를 통한 고택보존과 상생기반 강화
  - 실생활과 밀접한 부엌□화장실□욕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('14.12월)
- 전통가옥 증여 시, 증여세 감면 등 거주자 지원 체계 도입 추진

## □ 궁궐·능원의 체계적 원형 정비

- 조선왕궁 복원 정비를 통한 정체성 회복
  - 경복궁(소주방□홍복전권역), 덕수궁(석어당, 홍복전), 창덕궁(대조전 회정당), 사직단
  - 변형된 덕수궁 석조전을 고종황제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 전시 공개하여 대한제국 정체성 도모(14억원)
- 정릉(재실), 선릉(신로) 원형복원 및 부적합 시설물 철거□정비

## □ 폐사지, 종교 근대문화유산 조사·발굴

-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폐사지의 역사적□학술적 가치 규명(1,368개소, 126억원)
- 종교분야 근□현대 문화유산의 일제조사로 등록 다양화 기반 마련(1억원)

### □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

- 「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」 기준에 맞춘 무형문화유산 보존·전승체계 마련
  - 「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('14년)
  - 보존범위 확대, 전통공예 활성화 지원 정책,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 수요 반영
    - \* 기존 가예능 위주에서 전통지식, 생활관습, 사회의식까지 무형문화유산 범위 확대
- 헤이그협약 국내이행을 위한 전시문화재 보호체계 도입('14년)
  - 「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」 제정

### □ 근·현대 유물 보존관리체계 구축으로 잠재적 문화재 자원 보호

-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대상으로 '예비문화재 제도' 도입
  - 제도화를 위해 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 추진('14년. 상반기)
- 근·현대 체육, 산업기술 분야 유물 등 예비문화재 선정

#### 예비문화재 선정 대상 (예시)



2010년 밴쿠버올림픽 김연아 금메달 스케이트



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 개통시 사용 전동차



김수환 추기경 서임 초기 착용했던 수단(1969 ~ 1970년대)

### □ 예방적 문화재보존을 위한 문화재보호기금 확충

- 복권수익금 5%→10% 확대를 통한 문화재보호기금 재원 확보 추진('17년까지)
-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('14.1.1일)
- 타 기금 중 여유자금 일부전입 협의

◆ **(현황)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, 쉽게 체험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부족**

● 문화유산을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

\* 문화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: (1위) 역사체험공간(83.9%) > (2위) 교육공간(82.7%) / '12. 8월, 서울문화유산연구원

\* 75세이상 어르신 205만명 중 143만명(70%), 평생 동안 고궁 미관람(추정)

● 휴식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국민의 생각과 달리, 방문 만족도는 여전히 미흡

\* 방문 목적 : (1위) 휴식(48.5%) > (2위) 역사체험(20.9%)

\* 방문 만족도 : 만족(63.4%) > 보통 이하(36.6%)

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□공개 부족

\*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 개방□공유 및 개발된 콘텐츠의 산업화 활용 미흡

◆ **(추진방향)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문화유산 향유·활용 정책 추진으로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지원**

● **(향유기회 확대)**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별 맞춤형 문화유산 체험 기회 제공

● **(브랜드 가치 제고)** 전통문화유산 내재적 가치 재창출로 역사문화 브랜드 가치 제고

\* 국가브랜드 : 궁궐, 서울성곽, 왕릉, 왕실 대표 활용프로그램 창출

\* 지역브랜드 : 향교, 서원 등 지역대표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육성

● **(문화유산 콘텐츠 확충)** 다양한 콘텐츠의 최종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마련 및 산업화 지원 적극 추진

## 7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

### □ **어르신, 우리 궁궐 나들이 생애 첫 체험**

- 75세 이상 고궁 미관람 어르신 대상, '고궁 체험 프로그램' 추진
  - \* 75세 이상 어르신 205만명 중 143만명(70%)이 평생 동안 고궁 미관람 추정
- 맞춤형 '문화유산 누리사업' 프로그램 개설운영(2회, 1억원)
  - 어르신을 위한 '궁궐(경복궁, 창덕궁) 누리 버스' 운영
  - 손자□손녀(가족)와 함께 '궁궐(경복궁, 창덕궁) 누리 버스' 운영
    - \* '14년 시범실시(5월 아버지 날, 10월 문화의 날) 후, '15년부터 본격 실시

#### 어르신 '우리 궁궐 나들이 생애 첫 체험' 홍보 계획

- \* (홍보전략) ▲ 국민 체감형 ▲ 관련 부처·NGO 협업 홍보
- \* (추진방안) '고궁 체험 문화재 누리' 주요 프로그램 정보 제공
  - 신문 기획보도, 민간포털 정부 보유매체 등 활용 온라인 홍보
- \* (사회확산) 관계 부처 및 민간단체까지 '고궁 체험 문화재 누리' 참여 확산
  - 노인협회 및 보건복지부□지자체와 공동 홍보 추진

### □ **'몸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' 체험문화 확산**

- 왕실문화 콘텐츠를 명품 체험프로그램화
  - 수라간 최고 상궁, 왕실태교, 궁중 문화축전(5월, 10억원) 등 개최
    - \* 명품 체험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왕실문화 교육□보존처리 기능 강화 추진
  - 왕릉 생태체험교실, 왕의 숲 유치원, 왕릉에서 듣는 학교수업 등 운영

#### 체험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



수라간 최고 상궁



조선왕릉 병풍석 문양  
(십이지신) 만들기 체험



속닥속닥 왕릉이야기

- 발굴□조사현장, 전통가옥 등 문화유산현장을 체험 콘텐츠화
  - 민속마을□종가와 연계 생활속 전통문화 체험
    - \* 맏돌, 절구, 디딜방아, 전통혼례 □제례 등
  - 나도 고고학자(문화재연구소), 해양문화 체험교실, 매듭엮기 등 운영
- 왕실문화 체험프로그램(장애인, 미혼모), 청소년 문화유산 힐링 및 한국의 세계유산 탐방(결손가정), 전통문화 체험교육(다문화가족) 실시
- 문화 소외지역 대상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
  - '찾아가는 무형문화재'(연중, 4.6억원/ 문화재보호재단)
  - '찾아가는 이동박물관'(연 3회), '섬마을 다문화가족 초청행사'(연 2회) 등

## □ 우리의 가락, 아리랑'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대표 문화축제화

-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'아리랑' 확산과 전승기반 구축
  - 국내외 아리랑 전승단체가 참여하는 '아리랑 대축제'\* 개최(10월, 7억원/문화재청□문화융성위원회□서울시)
    - \*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여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한민족의 문화 축제로 개발하고 문화유산콘텐츠로도 활용
- 아리랑 전승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
  -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추진
    - \* '15.1월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 시행
  - 생활 속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'아리랑의 날' 제정 추진
    - \* 의견수렴(2~3월) 및 제정안 마련(5월)
  - '아리랑' 을 주제로 한 융□복합, 세계화 사업 추진(문체부)
    - \* 미디어아트와 아리랑의 만남, 방송사 연계 특집다큐 등

## □ 궁능 무료관람 및 비공개 지역 단계적 개방 확대

- '문화의 날'(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) 궁능 일제 무료개방
- 고궁□왕릉의 정취를 만끽 할 수 있도록 궁능 단계적 개방 확대
  - 고궁(경복궁, 창경궁) 야간개방 확대('13년 17일→'14년 42일)
    - \* 쾌적한 관람환경 및 안전관리를 위해 일일관람인원 제한
  - 사릉□강릉 등 조선왕릉 공개제한 지역 단계적 개방(1월)

## □ 전통문화 학교교육 강화로 문화유산 창의인재 양성

- '문화유산 체험으로 문제해결력 증진' 선순환 교육시스템 확산
  - 현장답사 실습수업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 지원(창의체험학교/2억원)
  - 민간발굴기관의 발굴현장을 청소년 고고학체험 교육과 연계(1억원)
- 현장감 있는 문화유산교육을 위해 학교방문교육 지원 강화
  - 국악□전통무용 분야 신설, 지원학교 확대('13년 22개→'14년 35개, 7억원)
    - \* 장애특수학교, 다문화교육센터,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
  -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문화유산 수업안, 도서, 영상 콘텐츠 개발 보급
  -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모듬활동,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방식 도입
    - \* 움집 짓기, 기와 채색, 스토리텔링, 문화유산 골든벨 등
- 문화유산 콘텐츠를 역사교육에 활용하여 한국사 이해도 증진
  - EBS(디지털리소스뱅크, 4~6월, 120편), 헤리티지채널을 활용하여 교육서비스 확대

## □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문화재 품격 제고

- 현대적 디자인과 알기 쉬운 용어로 안내판 정비 체계 개선
  - 어려운 학술적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흥미 및 친근감 유발
  - 안내판 오류신고센터 등을 통해 오류검증시스템 운영
  - 문화재 안내판 전수조사(3월 완료) 결과와 정비계획 연계
- 안내판 정비 현장의 혼선방지를 위한 영문용례집 배포(6월, 0.5억원)

## 8 매력적 문화유산 공간 조성

### □ 문화유산을 매력적 장소로 탈바꿈 하기 위한 현대적 활용 추진

- 지역문화유산을 보물로 인식하는 가치 확산 및 프로그램 운영
  -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 및 전통공간 활성화(70개, 36억원)
    - \* (예시) 임시정부청사 체험프로그램(부산), 청소년 대상 고싸움놀이(광주)
  - 향교 서원 활용 전통문화 전승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(유교아카데미 등)로 지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(38개, 13억원)
- 주민주도의 문화재 보존과 지역발전 기반 형성
  - 지역 문화유산자원의 매력창출을 위한 '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' 사업 필요성 확산
    - \* 해외사례 : 일본의 토요오가시(천연기념물 황새고향공원), 연 관광수입 600억원
- '문화와 역사가 살아숨쉬는 궁궐과 도성 만들기 사업' 확대 추진(64.5억원)
  - 수문장 교대의식, 창덕궁 달빛기행, 덕수궁 풍류, 궁궐호위군 사열의식(첩종), 궁궐 인문학 강좌 등 궁궐 활용 프로그램 지속 추진
  - 궁중문화축전, 광화문 미디어파사드,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 등 궁궐과 도성 연계 확대

### □ 고도(古都)지역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전통 복원정비 추진

- 고도의 지역특색을 고려한 핵심유적 복원 정비 추진(166억원)
  - 신라왕경 골격 복원 및 「백제역사지구」 보존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가치 증진
- 역사문화환경 정체성 회복 및 활력 있는 고도육성
  - 역사문화환경과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반 강화
    - \* 주민지원 사업(주거환경 개선 등) 근거 구체화 등을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' 개정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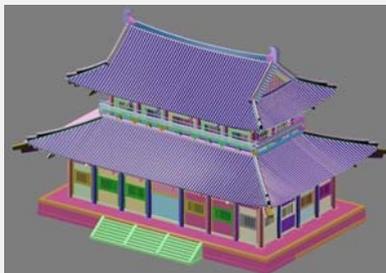
### □ IT 기술과 연계한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·육성으로 산업화 지원

- 융합형 가상현실을 고궁□세계유산□조선왕릉 등에 적용하는 서비스 개발(15억원)
  - 문화유산을 이동하면서 보는듯한 가상현실기술 적용으로 현장감 배가
- 건축□문화콘텐츠 등 산업에 활용 가능한 관련기술개발 지원('14년)
  - 문화유산 과거모습 가상체험, 전시관 가상체험, 디지털 원형복원 등 융합기술 연구개발 기반 조성(2억원)
    - \* BIM 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) 기법을 활용한 목조문화재 안전성 분석 시스템 개발(전통건축+정보화⇒안전진단, 3D 문화콘텐츠) 등
  - 현대적 활용과 연계한 문화재 보존기술□전통소재 연구개발 추진(2.8억원)
    - \* 문화재보존기술·전통소재 개발(공예기술+과학⇒친환경 건축마감재, 도료, 살충제)

#### 문화유산 산업화 가능 사례



목조건물 3차원 안전진단



전통건축물 3D 콘텐츠 제작



전통단청 재현 및 산업화

- 한국전통문화대학교 '문화유산 산업대학원' 신설 추진('15년 개원)
- 문화적□창의적 전통문화 콘텐츠 및 상품연구개발 지원
  - 개발된 융복합 기술□상품의 특허출원 및 판매□유통 등 전통문화 산업화 지원
    - \*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국립무형유산원, 문화재보호재단 참여

## □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 개방·공유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

- 문화재 주변 건축여부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선택 기회 제공
  - 지역별 현상변경 허가여부, 건축행위 허용기준,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등 규제지역 공간정보 인터넷 공개(11억원)
- 발굴조사 처리절차□비용 공개로 투명성 강화 및 서민부담 완화
  - 소규모 발굴경비지원 처리절차□시기 등 실시간 공개

## □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공개로 국민편의 제고

- 사회□역사교육(청소년), 수화□자막(장애인)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(6억원)
- 기관별 분산된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서비스로 대국민 접근성 제고
  - 문화재청□지자체□유관기관 수집□연계 정보 및 콘텐츠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(230만건), 인문자산의 산업적 활용 지원(2억원)
-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\* 전시콘텐츠 제작(3건, 7억원)

\* '18년 개관, 485억원(행복청 부담), 문화재청 운영

## □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유산정보 활용 체계 구축

- 문화재청□지자체□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, 정보공유 확대
  - 종이형태로 관리되던 문화재 관리대장을 전자대장으로 통합관리
  - 문화재 지정□변경□보수 등 문화유산 기록의 DB화 및 영구보존(11억원)
    - \* 문서, 도서, 도면, 시청각, 보고서 등(33만권) : 23만권('18년까지)/ 기완료 10만권
  - 해당 정보의 기관 간 공유 확대 및 행정 효율성 제고
- 정부3.0 기반, 국가유물정보 통합관리 지원('14~'16년)
  - 국가유물정보 통합전략계획 수립, 국가유물정보 표준화위원회 상시화 및 표준분류체계 정립 등(문체부□문화재청□국립중앙박물관 등)
    - \* 표준유물관리시스템 개선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('15년), 유물정보 DB 품질개선 및 국가유물 데이터베이스 통합 추진('16년)

## 10 문화유산 세계화, 국제협력 강화

### □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국가 자긍심 고취

-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잠정목록 신규 발굴
  - '백제역사유적지구' 등재신청서 제출(1월 / ICOMOS 현장실사 하반기)
  - '줄다리기', '제주해녀문화'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제출(3월)
  - '서남해안 갯벌', '한국의 서원', '한양도성', '한국의 전통산사' 학술연구 및 등재신청서 작성(연중, 7억원)
-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가 등재 여부 결정(2건)
  - 세계문화유산(남한산성, 6월), 인류무형유산(농악, 11월)
-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전개(외교부,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조)
  - 무형문화유산 당사국 총회(6월), 세계유산위원회(6월), 무형유산위원회(11월) 등 국제회의 참석

### □ 유네스코 등재 유산 항구적 보존관리 체계 강화

- 세계유산의 미래지향적 특별보호 등을 위한 기반 구축
  - 「세계유산의 보존□관리□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추진
  - 세계유산지구 지정□활용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
- 세계유산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보존관리체계 개선
  - 보존 관리상의 문제점 사전파악, 문제해결 등 사후관리
  - 점검결과 실시간 등재 시스템 도입으로 상황대처능력 향상
- 역량강화 교육(14.11월)을 통한 올바른 세계유산 관리기법 전파
  - 세계유산별 담당자, 세계유산 해설사 등
- 지속적 가치보존 대책 마련을 위한 세계유산 포럼 개최 등 재정 지원 규모 확대 분위기 조성(7월, 0.7억원)

## □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환수·활용 기반 확대

- 체계적인 조사·연구를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기반 조성
  - 국외문화재 현황과 가치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확대(6,000점, 7억원)
  - 문화재 반출과정의 불법·부당성 입증을 위한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강화(0.7억원)
  - 외국경매소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국외문화재 유통정보 파악
- 국제·민간협력을 통한 실효적 환수 체계 운영
  - 한·미 공조체계 강화로 한국전 당시 도난문화재 환수
    - \*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관세청-문화재청 협력각서 체결
  - 민간단체 환수활동 지원(6개 단체/1.5억원)으로 우호적 환수여건 조성
  -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(ICPRCP) 참석(6월/프랑스) 및 「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」 신설 운영(3월)

## □ 문화재 보존·관리 선도국가 위상 강화

-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(10억원)
  - 저개발국 세계유산 보존 관리 지원
    - \* 라오스(홍랑시다 사원), 캄보디아(프레아피투 사원), 미얀마(바간유적) 등
- 무형유산분야 영향력 확대를 위해 '유네스코 아리랑 신탁기금' 신설 여건 조성
- 국제 문화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의무분담금 및 신탁기금 납부(계속/ 10억원)
  - \* UNESCO 세계유산 및 무형유산협약 분담금, ICCROM 분담금, IUCN 분담금

## 11 문화재 교류를 통한 남북 소통 여건 조성

### □ 북한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

- 세계유산 '개성역사유적지구' 남북 공동 보존
  - 개성 고려궁성(만월대) 남북공동 발굴조사(4~6월)
  - '개성역사유적지구' 내 문화재 현황조사 및 보수 정비(5~9월)
-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남북 공동 발굴조사(9월)
- 북 중, 남 북 접경지역 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
  - 북 중 접경지역 고구려 발해유적 남북공동 학술조사(10월)
  - DMZ 내 공예도성 남북공동 학술조사(11월)
  - 민통선지역 문화유산 종합학술연구 추진(연중)

### □ 북한 내 대규모 개발지역 남북공동 문화재 현황조사

- 철도·도로 건설부지 등에 대한 남북공동 학술조사
  - 통일부 및 학회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추진

### □ 통일대비 북한문화유산 남북공동 보존관리기반 조성

- 안정적인 남북한 문화재 중장기 교류 기반 마련
  - 북한문화재 관련 수행조직□관리체계 분석 등
- 북한문화유산 DB 남북공동 구축 추진
- 통일대비 남북한 문화재보호법제 통합 연구
- 북한 내 문화재 전문인력 교육지원
  -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문화재 분야 남북한 격차 및 이질감 해소